

국회 추경 심사 본격 돌입… 與 “7월 4일까지 처리”

6개 상임위 추경안 심사 착수
민주 “‘골든 타임’ 놓쳐선 안돼”
野 “소비쿠폰 당선축하금 안돼”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 ‘걸림돌’

국회는 25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다 보니 앞으로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버리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공식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대치하면서 예결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추경 심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소생하는 ‘내란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與 정청래·박찬대, 유튜브서 당심 잡기 경쟁

정 “전광석화처럼 개혁 하겠다”
박 “여당 정치 효능감 보이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5일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핵심인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로 이전보다 높아진 만큼,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 유튜브 방송 등에 집중적으로 출연하며 당심에 구애하는 모습이다. 당원과 지지층의 주목도가 높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매불쇼’, ‘이동형TV’ 등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표밭갈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지지층의 이목을 끌 만한 현안을 두고 선명성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페이스북에서는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정청래 의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석열의 재구속은 물론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박찬대 의원)”는 등 현

안별로 시시각각 메시지가 올라온다. 각자의 강점을 부각해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한발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은 신속한 개혁 추진을 내세웠다. 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당 대표가 되면 초전박살, 임전무퇴의 자세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해지우겠다”며 “싸움은 당에서 정청래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 의원이 자신을 ‘인파이터’, 박 의원을 ‘아웃복서’에 각각 빗댄 것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도 해석됐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인파이터는 일단 공격해서 기회를 잡는 형태인데, 이것은 야당일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집권 여당이 됐으니 치밀하게 계획하고 포인트를 잡아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만드는 것”

6·25 전쟁 75주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움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정위,李정부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소통 플랫폼의 이름을 ‘모두의 광장’으로 정하고 7월 23일까지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운영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이날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모를 통해 접수한 4544건 중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통해 정했다. 국민 누구나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음 달 23일까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 공문화 및 속의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오른쪽)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통과

계엄 선포 국무회의때 회의록 작성
국회 통고시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로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

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회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하정우 “공공AX, AI 3대 강국 이끄는 마중물”

제8회 전자정부의 날 축하
“똑똑한 사회안전망 구축”

하정우(사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25일 “공공부문 AX(인공지능 대전환)는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AI3대 강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축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정부의 날’은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한 컴퓨터(IBM 1401)의 가동일인 1967년 6월 24일을 기



념하는 날로, 2017년 제정됐다.

하 수석은 “우리 정부는 공공 AX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먼저 챙겨드리는, 똑똑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관행에 의존하며 비효율적으로 해왔던 공무원의 업무처리도 공공 AX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민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일

을 잘하는 공직 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 소통 디지털 플랫폼과 투명한 행정 프로세스를 통해 국민주권도 실현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공 AX를 확산할 수 있는 ‘추진 체계’라고 그는 짚었다.

하 수석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AI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범정부 AI 대전환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967년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날로그에서 전자로의 전환에 도전해 성공을 이뤄냈다”며 “이것이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첫걸음이 됐듯, 이번 도전이 AI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AI 3대 강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